

# 이재명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

### 민생경제 회복 기자회견

#### 尹 건축재정 비판 확장재정 강조 R&D·지역화폐 예산 회복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축은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복귀 이후 열흘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모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출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지명적 폐착”이라고 쓰아 붙였다.

그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도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연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기업의 소비 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

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차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다”면서 “구호나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 검찰 정당법 위반 피의자 명시

### 임·허 “300만원 받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자금 실태 과정에 관련한 혐의로도 조사받았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임종성(58·경기 광주), 허종식(61·인천 동구미추홀구)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영장에 두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하면서 이들이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으로부터, 송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과 허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300만 원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분하고 정직하게 지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김경만 비례대표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기준,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여·야 비례대표 47명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모두 3421건이며, 이 가운데 22.16%인 758건이 통과됐다. 이 수치는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의 개수를 의미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가결률은 30.33%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38.54%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총 96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37건이 통과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기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만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 비례대표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로 선출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표발의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총선거획단 출범...비명계 공천 우려 불식 과제

### 내주초 첫 회의 총선 밑그림

더불어민주당 총선거획단이 조만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을 그린다. 특히 ‘진이 재명계’가 기획단에 대거 포함됐다는 비난 속에서 총선 공천 과정의 분열 조짐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거획단 관계자는 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는 내주 초”라며 “세세한 물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만큼, 총선거획단 단계에선 큰 틀에서의 비전과 담론, 방향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획단을 통해 총선 청사진을 그리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강화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윤리 기준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 설명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월 유승준 전력자,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천 배제하고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전력자에 대해서 감점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 자산 보유 및 투기 전력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온다. 앞서 총선거획단 위원 구성을 두고 당내 비주류로부터 ‘진명(진이재명)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할 공정한 공천 방안 마련도 논의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 주요 전략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총선거획단은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단순 공천 최소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기존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초저출생, 기후 위기 등 미래 특별 의제를 지정,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관련 인물로 채우는 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혁신안을 발표하며 당에 요구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힘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진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거획단에서 시스템, 기존 공천 룰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새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플랫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기록들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페널티 강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재갑 “해남 간척지 임대료 인상 요구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일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여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윤재갑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를 못 할랑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